

## 이슈브리프

No. 2025-35

## 2025년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이동규

연구위원

2025-11-06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0월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이어서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시진핑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뿐 아니라,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및 민생과 관련된 7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서 한중 양국은 대내외적으로 한중 간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향후 한중관계의 회복과 발전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수출통제 등 한중 간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가 도출되지 않아 이러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한중 간 입장 차와 이견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또한, 중국은 양자관계를 넘어 다자주의, 아시아태평양공동체 등 거시적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중관계의 관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 과정에서 한미 및 한미일 협력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협력 범위와 한계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중국은 남북관계 대화 환경 조성을 명목으로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고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는 미국 및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범위와 한계를 먼저 설정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이슈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정하고 중국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및 유사입장국과의 대화를 강화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둘째,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외형적 성과보다 한중 간 현안 과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중국의 구체적 입장을 파악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부 간 소통이 강화되는 만큼 북한 비핵화, 중국의 수출통제, 서해 구조물, 한한령 등 한중 현안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중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각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호응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전략적 소통을 기대했다.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수록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과시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을 회유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중국이 추진하는 다자주의, 경제협력, 공동번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 시진핑 국민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의 의미

중국이 2026년 APEC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만큼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기정사실이였다. 이를 한중관계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시진핑의 국민 방문을 적극 추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10월 24일이 되어서야 시진핑의 국민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시진핑의 대내외 정치 일정, 미중 정상회담 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한 중국의 불만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소위 '가치 외교'를 미국의 반중 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지역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반발했다.<sup>1</sup>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이유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국의 중심의 실용 외교'를 주창하며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외교 노선의 유연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달리 미국에 경사되지 않고 소위 '균형 외교'를 추진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났다.<sup>2</sup>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는 중국의 기대와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하고, 오히려 8월 말에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고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유지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2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강연에서 한국이 과거와 같이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현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의 기본 정책에 어긋나게 행동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sup>3</sup>

중국 글로벌타임즈(Global Times)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무조건적인 대중국 견제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sup>4</sup> 중국 정부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불편함을 내비치며 간접적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방일 및 방미 일정을 앞두고 중국에 특사단을 보냈지만, 과거와 달리 시진핑과의 면담은 없었다. 또한 중국은 8월 28일, 즉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날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공식 발표했고, 기념행사에서 김정은을 특별 예우하고 6년여 만에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과시했다. 2025년 10월 14일 중국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것을 빌미로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수평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sup>5</sup>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고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양해각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 등 7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서 한중 양국은 대내외적으로 한중 간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향후 한중관계의 회복과 발전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했다.

## 한중관계와 관련된 우리의 당면 과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뤄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회복'이라는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 한중 양국이 7건의 MOU를 체결하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부분이 경제 및 민생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앞으로 구체적 이행 계획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의 이견과 입장 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이 양자 간 협력에 치중했다면, 중국은 양자 차원을 넘어 다자주의, 아시아태평양공동체 등 거시적 차원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자신의 글로벌 전략과 미중관계의 관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겨줬다.

**[표 1] 한중 정상회담 관련 한국정부 및 중국정부 발표 내용 비교**

| 분야       | 한국정부 발표                                                                         | 중국정부 발표                                                                                              |
|----------|---------------------------------------------------------------------------------|------------------------------------------------------------------------------------------------------|
| 한중관계 인식  | -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계기”로 평가하며, 새로운 협력 국면 진입을 강조.                               | - 양국을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 규정하며, 안정적 발전과 장기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
| 협력 강조 분야 | - 정치적 신뢰 확보<br>-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br>- 한중 전략소통 강화<br>- 경제 및 민생 관련 MOU 등 구체적 협력계획을 명시 | - 전략적 소통 및 상호 신뢰 강화<br>- 호혜 협력 심화<br>- 국민정서 고양 및 상호 이해 증진<br>- 다자주의, 다자무역체제, 아시아태평양공동체 등 등 거시적 담론 강조 |
| 한반도 안보   | 비핵화와 남북 대화 재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                                                  | 언급 없음.                                                                                               |

출처: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대통령실, 2025.11.01)과 “習近平同韓國總統李在明會談”(中國外交部, 2025.11.01) 내용을 저자가 정리.

## 1. 현안 문제 관련 중국의 모호한 입장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한한령, 중국의 수출 통제 등 양자 간 이슈를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대응하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오히려 중국은 한중 양자 간 이슈보다는 다자주의, 다자무역체제, 아시아태평양공동체 등 거시적 담론을 강조했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시진핑은 한·중관계의 회복과 발전에 공감대를 표명하면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양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글로벌 및 지역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6</sup>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라는 슬로건 하에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공급망 안정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정책과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물론, 미

동맹 및 협력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항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한중 양자 간 이슈보다 다자주의 및 다자무역체제를 강조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대항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아시아태평양공동체와 지역 협력, 공동 번영을 강조하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다자 및 지역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시진핑은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정상회의에서 주권 평등 준수,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실천,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 실질적 행동 중시를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Governance Initiative)'를 제안했다.<sup>7</sup> 2026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중국은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강조하며 지역 차원에서 반미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게도 다자주의, 자유무역 수호,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공개적 지지와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지지와 참여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을 비판하는 데에 사용하고 한미관계를 이간하려고 할 수도 있다.

## 2. 북중관계를 한국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중국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표명 등의 대북 유화책을 시행하며 북한과의 관계 회복과 이에 기반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동결(freeze)-축소(reduction)-폐기(dismantlement)'라는 3단계 비핵화 전략을 제안했고,<sup>8</sup> 9월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중단(stop)-축소(reduction)-폐기(dismantlement)'로 표현했다.<sup>9</sup> 대상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 전제되는 '동결'에 비해서 '중단'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그런 점에서 이는 북한의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미북 대화의 문턱을 낮춰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를 쌓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에 대해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을 매개로 북한의 의중을 확인하거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미북 대화가 불발됐지만, 트럼프 임기 내 미북 대화 개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소통 강화가 남북 대화 재개로 이어진다면 한국이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의도대로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날에金正恩의 전승절 참석을 발표했다. 중국이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을 전승절 행사에 초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金正恩 초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승절을 불참하고 일본 및 미국을 연이어 방문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이재명 정부 성향을 고려해 북한과의 관계를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인 것이다.<sup>10</sup>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법으로 '쌍잠정(雙暫停: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진(雙軌並進: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동시 추진)'을 주장해 왔다. 2025년 5월 12일에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 매커니즘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하며<sup>11</sup>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의 우선순위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매커니즘 구축에 있다. 중국은 북한과 고위급 교류 및 교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편, 한국에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국에게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빌미로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의 축소와 중단을 요구하며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협력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다.

### 3. 중국의 한미동맹 약화 시도 차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일단락했지만,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라는 이름 하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한국에게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 확대와 대중 견제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과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방위 부담을 완화하고 한미동맹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강조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sup>12</sup>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된다면, 중국은 그것을 지역 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축소이자 대만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로 인식할 것이다. 시진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고, 협상을 통해 갈등과 차이를 처리하자"고 언급했다.<sup>13</sup> 중국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핵심 이익을 명목으로 한국을 압박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게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역할 제한이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우회적으로 유도하며 지역 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 동맹 네트워크의 균열을 만들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기반으로 서해, 대만해협 등에서의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시행하며 지역 내에서 자신의 군사 영향력을 확장하려 할 것이다.

## 한국의 대중 정책 제언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 개선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한중관계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중국은 미중관계의 관점에서 한국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중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 과정에서 한미 및 한미일 협력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협력 범위와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상술했듯이 중국은 남북관계 대화 환경 조성을 명목으로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지지한다면서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고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유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APEC 기간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지역 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미북 대화에서의 협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과정은 미국 및 유사입장국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범위와 한계를 먼저 설정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야 한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이슈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정하고 중국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및 유사입장국과의 대화를 강화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둘째,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외형적 성과보다 한중 간 현안 과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중국의 구체적 입장을 파악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sup>14</sup> 그러나 실상 북한 비핵화, 중국의 수출통제, 서해 구조물, 한한령 등 한중 현안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외교 성과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부 간 소통이 강화되는 만큼 이러한 현안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중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각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호응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전략적 소통을 기대했다.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수록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과시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을 회유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과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하고, 한국이 미국에 경사되기보다 중국과의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를 빠르게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국내에서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받았고 중국에게 한국이 미 동맹의 ‘약한 고리(weak link)’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중국이 추진하는 다자주의 및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 저자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 전공으로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대일로: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확장과 그 함의”,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등이 있다.

<sup>1</sup> 李旻&唐曉, “尹錫悅의價值觀外交能走多遠?”, 中國國際問題研究院, 2023.06.21., [https://www.ciis.org.cn/yjcg/sspl/202306/t20230621\\_8993.html?utm](https://www.ciis.org.cn/yjcg/sspl/202306/t20230621_8993.html?utm).

<sup>2</sup> 唐曉&周曉倩, “中韓關係這些年走過的陰晴冷暖”, 中國國際問題研究院 時事評論, 2025.08.26., [https://www.ciis.org.cn/yjcg/sspl/202508/t20250826\\_9652.html](https://www.ciis.org.cn/yjcg/sspl/202508/t20250826_9652.html).

<sup>3</sup> “안미경중 더 이상 불가능... 실용외교 강조”, YTN, 2025.08.26.,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61858522485](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61858522485).

<sup>4</sup> “To adjust ‘security with US, economy with China,’ S.Korea must first address this key question: Global Times editorial”, Global Times, 2025.08.27.,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08/1341793.shtml>.

<sup>5</sup> 미국 무역법 301 조는 자국 무역을 제한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불공정 행위에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sup>6</sup> “習近平同韓國總統李在明通電話”, 中國外交部, 2025.06.10., [https://www.mfa.gov.cn/zyxw/202506/t20250610\\_11644434.shtml?utm](https://www.mfa.gov.cn/zyxw/202506/t20250610_11644434.shtml?utm).

<sup>7</sup> “Full text of Xi Jinping's speech at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Plus' Meeting”, China Daily, 2025.09.01., <https://www.chinadaily.com.cn/a/202509/01/WS68b57f8ca3108622abc9e4c0.html>.

<sup>8</sup> “李, 北비핵화보다 ‘북핵 동결’ 먼저 꺼냈다”, 동아일보, 2025.08.2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822/132232237/2>.

<sup>9</sup> “李대통령 “북핵 고도화 중단→축소→폐기” 비핵화 3 단계 해법 재확인”, 조선일보, 2025.09.24.,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9/24/V33LDX5425EX5OS4AA4NRGJVBM/](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9/24/V33LDX5425EX5OS4AA4NRGJVBM/).

<sup>10</sup> 차두현&이동규,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향후 북-중-러 관계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09.08., [https://www.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wr\\_id=550](https://www.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wr_id=550).

---

<sup>11</sup> “新時代的中國國家安全白皮書|新時代的中國國家安全”, 中國國務院, 2025.05.12.,

<http://www.mod.gov.cn/gfbw/fgwx/bps/16385614.html>.

<sup>12</sup> “이재명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 접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대통령실, 2025.11.04.,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NEUk9b1f>.

<sup>13</sup> “習近平同韓國總統李在明會談”, 中國外交部, 2025.11.01.,

[https://www.mfa.gov.cn/zyxw/202511/t20251101\\_11745426.shtml](https://www.mfa.gov.cn/zyxw/202511/t20251101_11745426.shtml).

<sup>14</sup> “시진핑 주석 국민방한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대통령실, 2025.11.01.,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QTdQAVBR>.